

서민금융기관 감독체계

한양대학교
이상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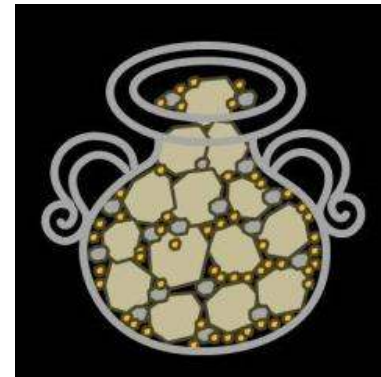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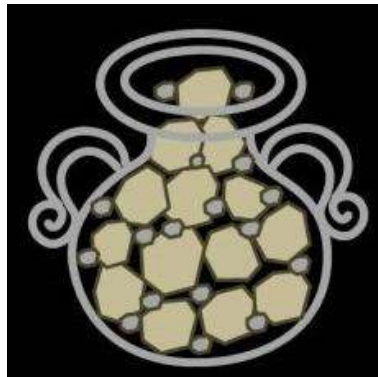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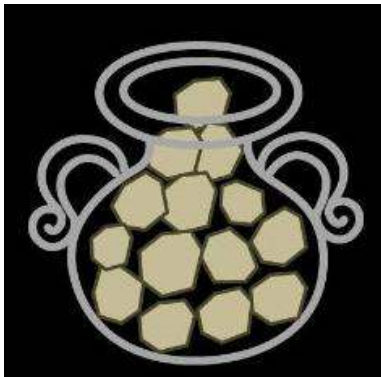
목 차



- I. 서민금융기관은 우리사회에 왜 필요한가?
-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A.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 B.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 C.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 D. 우체국 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
 - E.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 ○ ○ Ⅰ. 서민금융기관은 우리사회에 왜 필요한가? ○ ○ ○

- ◆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대립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보편적 금융이 바람직함
- ◆ 보편적 금융이라는 필요의 진공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형 돌멩이 (대형금융기관), 중소형 돌멩이 (중소형 금융기관), 모래알(서민 금융기관)이 존재해야 금융소비자들의 욕구(needs)를 완전히 충족 시킬 수 있음





1. 서민금융기관은 우리사회에 왜 필요한가?



◆ Implications

1. 대형 돌멩이에 적용되는 감독수준을 동일기능에 동일감독이라는 기능적 감독에 입각해 기계적으로 모래알에 적용할 수 없음
2. 지금까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방치해 오다가 한·EU 및 한미 FTA를 구실 삼아 감독수준을 급격하게 상향 적용 할 수 없음
3.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농촌 등의 금융소외계층에게도 금융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금융 차원에서 서민금융 감독 체계는 정비되어야 함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기본 원칙

1. 건전성 감독보다 소비자 보호 및 보편적 금융을 강조
2. 퍼주기 보다 시장원리 강화로 지속성 유지
3. 단순자금유통 보다 밀착경영 지도로 창업, 취업 등 고용을 연계하는 지원 확대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서민금융의 시장원리를 강화

1. 일반 서민금융의 시장원리 강화

- ❖ 정부의 보증지원 없이도 시장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이 공급되게 하는 것이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
- ❖ 기본적으로는 서민금융의 수요 및 risk 유형에 따라 서민금융 상품을 차별화하고,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도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부과하는 등 시장친화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해야 함
- ❖ 민간 금융기관이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함

2. 복지형 서민금융은 정책금융공사가 전담

- ❖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일반 서민금융을 제외한 정책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형 서민금융은 정책금융공사가 전담하도록 함
- ❖ 부득이하게 민간 금융기관이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함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금융위원회 2013년 8월 22일 발표)

1) 추진배경

- ❖ 그 동안 여신금융회사 등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금리 산정의 불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카드론 평균금리: (2009년) 19.2% → (2012년) 15.5%, ($\Delta 3.7\%p$)
 -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2009년) 25.9% → (2012년) 22.8%, ($\Delta 3.1\%p$)
- ❖ 대출금리 산정 시 업건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 금융회사별 자체 등급에 따라 제각각 대출금리 공시
 - 소비자의 금리 비교가능성 및 저금리 상품 선택권 제한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1) 추진배경

- ❖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및 업계 등과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구성.
- ❖ 금리 결정·운용체계의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하여 왔음
- ❖ 그 동안의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출금리 모범기준」 및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2) 대출금리 모범기준 주요내용

- ❖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
- ❖ 다만, 금리 자유화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기준을 운용하도록 유도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3) 금리체계 상호 비교

❖ 카드대출 및 여신 금리 체계

기본 원가			
조달원가	신용금리	업무원가	자본원가

✚ 목표이익률 ✚ 조정금리

❖ 상호금융 금리체계

기본 원가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자본원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 목표이익률 ✚ 조합장전결조정금리
부수거래감면금리

*출처 :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안)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제외)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안)
상호금융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안)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4) 금리체계 상호 비교

- ① 내부 신용등급은 카드 및 여신에는 있으나 상호금융에는 제외
- ② 중도상환 수수료는 여신에만 존재
- ③ 연체이자: 카드 및 여신에서는 연체이자율을 차등화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에는 제외
- ④ 모범 기준과 관련 법규, 약관 등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모범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약관 등의 우선 한다고 카드 및 여전모범기준의 보칙에 명시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5) 평 가

- ① 모범규준의 목적이 금리 산정의 투명성 제고로 상호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한 금리 인하에 있다면 금융소비자가 “금리쇼핑”을 할 수 있는 제도 구비 필요
 - 금리공시는 기본이고 금융소비자는 금리견적을 받아보고 이를 통해 대출받는 금융 회사를 결정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도 견적에 포함)
- ② 개인 신용대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모범규준도 필요
- ③ 금리도 일종의 가격이기 때문에 모범규준이 가격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함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B.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2013년 9월 17일 발표)

1) 추진배경

- ❖ 대부업 법('02.8월 제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규정
- ❖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 금융 업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①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 소비자 피해 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B.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1) 추진배경

②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7조원으로 크게 확대
-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 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6조원(전체의 87.4%)

③ “저신용 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13.7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非주택담보대출은 436.5조원이고, 이 중 7~10등급 대출은 69.0조원(NICE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 (금융회사 7~10등급 非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10.4%에 해당)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B.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1) 추진배경

- ④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 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를 개별 지 자체에서 등록.검사.제재하기에는 어려움
- ❖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전산 시스템 등),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B.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1) 추진배경

- ❖ 대부업체가 적절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비
- ❖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B.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2) 주요내용

❖ 기본방향

- ① 업태에 따라 (일반)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 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감독
- ② 자본금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부시장을 정비
-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를 수행
 - 매입채권추심업체 및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원회에서 등록·검사·제재업무 수행(금감감독원 위탁)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B.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2) 주요내용

❖ 대부업 제도 개선 방향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B.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3) 평 가

❖ 대부업에 대한 감독 관리 체계 구비의 최종목적 중 하나는 이자율의 점진적인 하라면 채찍과 당근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함.

❖ 방 법

- 대부업체의 최고법정 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30%로 인하하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소형대부업체의 시장퇴출 충격을 완화할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방법을 자기자본 및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서 벗어나 상장과 공모 회사채 발행 등 다양화 시켜야 함.
- 신용대출 금리의 단층현상 완화 위해 여신전문 기관의 신용대출업무를 본업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업무 영위기준 완화,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상품 금리인하 또는 양자 사이에 경쟁 촉진 등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경쟁 촉진이 바람직함.
- 현재 300만원 이상 대출에 대해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본의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고 신용정보 DB 통합을 추진함.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C.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금융위원회 2013년 9월 17일 발표)

1) 추진배경

- ❖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0.9월)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13.5월)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제도적 미비점 보완
- ❖ 구조조정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이 다수 있으나 금융지주,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은 점차 소진
 - '11년 이후 매각된 19개사 중 18개사가 금융지주·증권사에 매각되었지만, 최근 예성·예쓰 가교저축은행 입찰에는 금융기관이 미 참여
- ❖ 이에 반해, 최근 일부 대부업체는 가교 저축은행 매각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수의사를 적극표명
 - 예보의 가교저축은행 매각 시 대부업체가 인수 등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낮은 인수가격, 자진 철회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없었음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C.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1) 추진배경

-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저축은행)로 흡수할 경우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
- ❖ 예수금 등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
- ❖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파급효과와 예상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
 - ①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서 인수 후 저축은행을 대부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 ② 고금리 수취,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부정적 이미지 상존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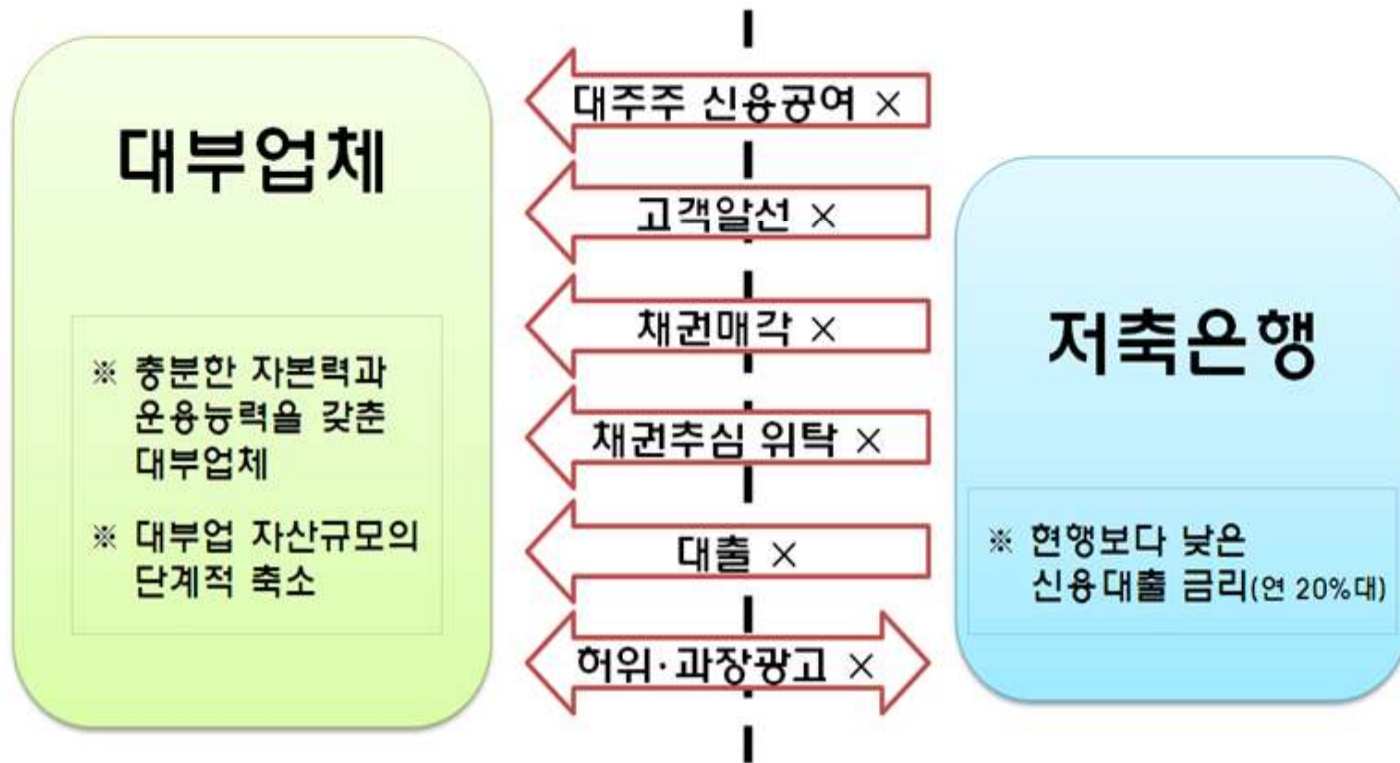
C.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2) 주요 내용

- ❖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
- ❖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 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 C.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3) 저축은행-대부업체 간 이행상충방지 방안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C.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4) 평 가

- ❖ 저축은행 설립 목적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은행 흉내를 내도록 부추긴 것이 감독당국임
- ❖ 저축은행 중에서도 프로젝트 financing(PF) 대신 본업에 충실한 저축은행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음
- ❖ 부실한 저축은행을 살린다고 저축은행에 걸맞지 않은 펀드 판매 등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잉태
- ❖ 이보다 저축은행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 필요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C.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4) 평 가

- ❖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축적된 신용평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 ❖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두 기관의 목적이 개인 신용대출이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잡혀야 함
-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봉쇄해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것보다 인수를 허용해 서민들이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선택은 자명
- ❖ 대부업체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인데 이를 겁내 처음부터 인수를 막는 것은 감독당국 스스로 무능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D. 우체국 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2013년 5월 9일 발표)

1) 추진배경

- ❖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 경쟁 논란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를 필요로 함.
- ❖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 등은 T/F를 구성(12.3)하여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협업을 통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함
 - 미래부(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 한·EU 및 한·미FTA 협정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을 약속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을 위해 이행 필요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D. 우체국 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

2) 주요 내용

- ❖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 ❖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관리·감독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D. 우체국 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

3) 평 가

① 재무 건전성 측정 기준

- 1999년 EU방식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준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RBC 방법으로 전환하였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지급여력제도와 2년간 병행운행 2011년 4월부터 RBC로 전환
- 재무건전성 측정기준으로 risk를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는 RBC*를 도입하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무리
- ✓ Risk Based Capital : 보험회사의 Risk량(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D. 우체국 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

3) 평 가

- ②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두고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제 감독에는 미흡함.

즉, 공제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해 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장치의 미비 또는 부당 모집 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의 미비와 이에 따른 공제가입자 보호장치의 미흡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E.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13년 9월 11일 발표)

1) 추진 배경

- ① 서민금융 지원기관들간 연계·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
 -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하여 효과적 지원이 어려움
 - ② 유사한 상품들간 지원기준 차이 등으로 수요자 혼란 초래
 - (예) · 햇살론/바꿔드림론 : 6~10등급&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 2,600만원 이하
 - 새희망홀씨 : 5~10등급&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 3,000만원 이하
 - 미소금융의 휴면예금 출연문제* 및 최근 연체율 증가** 등과 관련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최근 대법원에서 5년간 무거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이자지급을 계속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13.6말 미소금융 7.1%, 햇살론(대위변제율) 9.5%, 새희망홀씨 2.9%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E.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1) 추진 배경

- ③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에서 신용상담, 고용·복지 지원과 결합된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취약하여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고, 공·사 채무조정제도간 바람직한 역할 검토 필요
 - 금융지원으로 자활이 곤란한 무직자 등은 고용·복지 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원 확보 및 재산형성기반의 확충 필요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E.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2) 기본 제도 개선 방향

① 서민금융 유관기관 통합으로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기능을 분리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
- 통합기구에서 창업자금 지원, 보증, 신용회복, 취업지원, 교육 및 상담 등 기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통합·운영토록 하여 시너지 극대화
- 국민행복기금사업은 현재처럼 캠프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② 서민금융상품 운영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내실화

-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하고, 햇살론 보증비율(95%)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 미소금융은 휴면예금의 지속 확보를 위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배구조 및 사업모델을 개선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E.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2) 기본 제도 개선 방향

③ 서민금융의 “質的 개선” 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여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One-stop 서비스* 제공
- 단일 창구에서 수요자 별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 서민금융제도와 고용부, 복지부, 중기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민금융·고용·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E.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3) 평 가

- ① 미소금융사업의 문제점으로 효과적인 컨설팅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이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점이 수 차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음
- ② 미소금융의 대출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하여 햇살론, 새 희망 홀씨, 바뀌드림론 등 여타 서민금융제도와 형평성 문제 우려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금융위원회 2013년 1월 18일 발표)

1) 현 황

- ❖ 12.9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450조원(전체 금융권의 13.6%), 조합수는 3,776개
 - 각 상호금융조합 기관별 수행업무는 동일하나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달라 규제가 상이(각 주무부처가 규제 등 제도 운용, 금감원·중앙회가 감독·검사)

❖ 상호금융조합 현황 ('12.9 말 기준)

구 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합 계
총자산(조원)		54.1	270.4	19.0	4.9	101.8	450.2
조합수(개)		953	1,165	90	136	1,432	3,776
조합원(천명)		5,975	2,453	158	470	9,415	18,471
주무부처		금융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행안부	-
건전성 감독		금융위(원)	금융위(원)	금융위(원)	금융위(원)	행안부	-
검사 인력	중앙회(명)	45	223	32	22	90	412
	금감원(명)	4	5	4	-	-	13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1) 현 황

❖ (여신) 저신용자 및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

- 총여신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 : 상호금융 21%, 은행 8%('12.9월)
- 총여신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 상호금융 80%('12.6월), 은행 51%('12.5월)
- 리스크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필요*
- 그 동안 은행 등 타 업권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
- (☞ '13.7월부터 은행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예정)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1) 현 황

- ❖ (수신) '09년 비과세 예탁금한도 확대('09년, 2,000만원→3,000만원) 이 후 상대적인 고금리 이점*이 부각되면서 증가
 - 세후 평균금리('12.10월, %) : 상호금융 3.70, 저축은행 3.33, 은행 2.85
 - 상호금융 총수신 : '08말 253조원 → '12.9말 378조원(125조원<50%↑> 증가)
 - 개별조합들은 수신 증가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고위험여신 및 유가증권투자 등으로 운용
 - 최근 비과세 예탁금제도 재연장('12→'15년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4,000→2,000만원) 등으로 수신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 (외부감사)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별로 외부감사기준이 상이
 - 신협.수협 : 총자산 300억, 농협.새마을 : 총자산 500억, 산림 : 총자산이 조합평균 이상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2) 감독 강화 방향

❖ 잠재 부실요인 선제적 관리

①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 EWS) 도입 (‘13.2월)

- (현행) 금감원. 각 중앙회가 3,700여개의 단위조합을 상시 모니터링. 감독하고 있으나 체계적 역할분담. 감독 효율성 확보 한계
- (개선) 전체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상시감시를 지속
- 수신 급증. 高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조합을 별도로 선정(분기별 조정)하여 금감원이 중점 관리 (“선택과 집중”)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2) 감독 강화 방향

❖ 잠재 부실요인 선제적 관리

②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

- 중앙회를 통한 수신금리 합리화 지도, 수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 조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중점관리조합”)
- 중앙회 예탁금 실적배당제 전환 추진 (‘13년내)
- (현행)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리 (‘12.10월 평균 3.5% 내외) 지급 보장
- 단위조합의 여신운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수신증가는 조합의 자체 리스크 뿐 아니라 중앙회*의 재무리스크 확대 요인으로도 작용
- 중앙회 총자산 : ‘08말 67.5조원 → ’ 12.9월 139.6조원(‘08말 대비 107%↑)
- (개선) 예탁금 운용실적을 반영한 실적배당제 전환
- 전면적인 실적배당제 전환 이전에도 중앙회가 시장 금리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예탁금 금리를 수시 조정.지급(사실상 실적배당제와 유사)할 수 있도록 유도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2) 감독 강화 방향

❖ 조합 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기반 마련

① 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013년 내)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확대
- (현행) 상호금융기관별로 외부감사 기준이 상이하고 대부분 조합의 경우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 투명성 미흡
- (개선) 개별법상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업권간 정합성도 단계적으로 제고
-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도 약식으로 회계감사인의 확인 제도 도입 등을 검토
-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자본확충 유도(신협)
- (현행) 적기시정조치 미이행 조합에 대한 후속조치 근거가 부재하고, 출자금을 통한 자본 확충이 불가능
- (개선) 적기시정조치 장기미이행 조합에 대한 불이익·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금제도 개선 검토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2) 감독 강화 방향

❖ 조합 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기반 마련

②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감독기능·책임 강화 (2013년 내)

- 중앙회의 검사·감독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회의 개별조합 감독 업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을 강화

③ 상호금융 소관부처간 정책공조 강화 (지속)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형평성 제고 추진

II. 최근 발표된 서민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F.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

4) 평 가

- ❖ 13년 6월말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이 357.8조로 금융권 총자산의 10% 차지하고 있어 이사회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외부감사 등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 (연체비율 4.23% 예대율 69.9%) 특히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이사의 선임으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 ❖ 담보가 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신용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상호금융의 목적인데 금융당국의 건전성규제 강화로 담보대출만 이루어 지고 있음. 금융의 관점이 아닌 협동조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즉 조합원간의 공동유대가 상호금융의 경쟁력의 원천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계형대출이 주류를 이루어야 함.
- ❖ 자율적인 상시 구조조정이 필요
- ❖ 건전성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금융소비자 보호이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주력하여야 함